

정보통신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서석철^{*}, 이재완^{*}, 최연성^{*}, 고남영^{*}

*군산대학교

A Study of Exchange-cooperation Schem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Infomation and Communication Class

Suk-chul Seo^{*}, Jae-wan Lee^{*}, Yeon-sung Choi^{**}, Nam-young Ko^{**}

^{*}Kunsan University

E-mail : ssmouse@wave.kunsan.ac.kr

요 약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동질성의 빠른 회복과 물리적인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은 경제·사회의 전 부문에 걸친 남북한 교류협력의 양과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의 사례와, 남북한의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단계별 교류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Exchange-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sing the Information can say that it breaks down a physical barrier and recovers quickly national homogeneity between them. As a case of a unified Germany, Exchange-cooper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making a decision over the progress speed and quantity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which ranges over a wide field like economy and society.

This paper examines a unified Germany's precedent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Exchange-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so that Exchange-cooperation scheme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presents.

1. 서 론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도국에서도 깊이 인식되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자신의 개인전화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화는 물론, 남한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서비스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정보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통신망의 현대화에 많은 부분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와 북한의 정보화를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정

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 부문의 현황 분석, 정보통신 교류 및 협력 방안,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북한의 정보통신현황을 살펴보고,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을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동서독간 통일이전 통신부문의 교류협력을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동서독간 통신 교류협력이 주는 시사점과 남북한의 현 통신인프라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보화와 북한

오늘날 세계경제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지식 정보가 핵심이 되는 「지식주도경제(Knowledge-driven Economy)」로 변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효율성,

국가경제의 성장,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격차는 '지식격차'와 '정보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척도로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남한도 정보화 사업을 국가 발전의 요체로 인식하고 1987~1991년까지 제1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루었고, 1992~1996년까지 제2단계 사업에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96년 6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정보화를 통해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Cyber Korea 21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통신산업을 철저한 국가독점 아래 특유의 전체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사기업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찾아볼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분야의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중대주제로 미루어볼 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II.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

1. 북한의 통신 정책

북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통신의 개념과는 다르다. 북한은 우리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라고 하며 '체신을 통신(전기, 전화, 우편)을 접수, 전달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 부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정책은 사회주의 형태의 조직으로서 국민들간의 통신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보다는 주요 자원을 행정조직의 구성체계에 맞춘 행정 정보통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외전화는 행정목적만을 위하여 공용전화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설치된 산업전화로 공용통신을 이용하거나 각 체신소에 설치된 전화로 사적통신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도 넓은 의미로 볼 때 통신의 매체 전달 및 구분 유형 등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통신 생산물의 필요성이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공익성 위주보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출발한다.

2. 북한의 통신기구

북한의 통신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체신국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48년 9월 북한은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국을 체신부로 승격하였고, 1963년에는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체제의 확립과 집중화를 위하여 모든 체신기구를 통합시켜 단일운영체제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체신부의 기구는 7개 위원회 21개부를 9개 위원회 24개부로 증설했다가 12위원회 15개부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체신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구의 조직은 그림 1과 같다.

- ① 체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지휘 감독실시
- ② 각종 우편물과 배포업무 관장
- ③ 전신전화 시설의 계획과 설비관리
- ④ 무선전파의 통제와 감시·감독
- 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신업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협정체결 및 집행감독
- ⑥ 체신요원 양성과 확보에 관한 계획실시 및 지휘·감독
- ⑦ 체신분야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재 설비에 관한 계획과 분배
- ⑧ 전시체제하에서의 체신업무 관장
- ⑨ 성산하 전체기관의 영리업무에 관한 계획과분배
- ⑩ 체신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실적보고와 총계작성 및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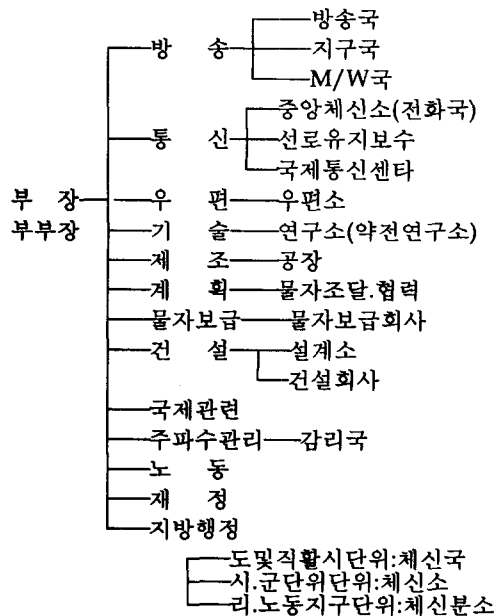


그림 1. 체신부 기구현황

3. 북한의 통신시설 현황

가. 통신의 발전과정

북한의 통신정책은 1940년대의 개조단계, 1950년대의 복구단계, 1960년대의 정착단계, 1970년대의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를 거쳐 현재는 현대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북한은 해방이후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개조단계(1946~50)에서, 1946년 2월 채신국을 창설하고 산하에 각 도 단위별로 통신국을 설치해 총 405개소의 우편국과 8개소의 통신공무국, 8개소의 중계국을 개설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통신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 기간 중 특기할 사항으로는 1946년 평양~원산, 평양~함흥 사이에 전화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전신·전화 통신망 확충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1940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전자통신공장 시설을 통한 전자공업 기반 구축에 착수하였다. 둘째, 전후 복구단계(1953~60)는 6·25전쟁 중 거의 파괴된 통신시설을 복구하는데 주력한 시기로서, 1957년에는 평양에 현대식 자동전화국 신의주에 자동전화교환기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의 공장 건설로는 1958년에 통신기계제작공장을 가동하였으며, 그 해 생산실적은 교환기 200대, 전화기 900대, 유선방송기 400대, 스피커 7,000대에 달하였다. 셋째, 정착단계인 1960년대에는 주민의 생활필수품 생산 촉구 및 지방산업 육성이 강조되어, 주민의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신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각 도간에 자동전화 도입되었고 시외전화기에서 교환기의 표시기 등의 기술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넷째,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인 1970년대에는 북한은 증가되는 통신수요의 충족과 방송출력의 강화, TV 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평양과 각 도 사이에 초단파 중계통신에 대한 다중화를 추진하여 주요 기업소들을 중앙과 직통으로 연결시키고, 군체신소들과 주요기관 내지는 기업소들의 구내통화를 자동화시켰다. 다섯째, 북한은 1980년대 이후 통신의 자동화, 종합화,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제3차 7개년계획(1986~1993)의 일환으로 낙후된 통신시설의 현대화 방침을 천명하고 1993년까지 전화회선수를 2백만회선으로 증대시키고 장거리 통신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989년의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및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통신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통신망 구축 현황

북한의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로 연결된 중앙집중체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평양에서 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전화는 3-4만회선에 불과하며, 한 읍에 전화가 1-2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시설은 과거 대

부분기계식 교환기였으나 최근 불란서 ALCATEL사의 중국 현지 합작공장(상하이 BELL사)에서 생산한 전전자 교환기를 도입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각도의 행정중심도시간은 전화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통신시설 발전상태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광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광케이블, 광전송장치 등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수백 회선 용량의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광통신망의 사용상의 제한과 자본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광통신망을 확장하고, 이 통신망이 ISDN과 같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 과감하게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1995년 9월 평양에서 함흥까지 300km의 광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최근 이 통신망은 나선지구로까지 연장되었다.

북한의 국제통신망은 공산권과는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간을 연결하는 유선망이 각각 구축되어 있다. 북한은 1981년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Organization of Asia-Pacific News Agencies)에 가입하였고, 1984년 INTERSPUTNIK(공산권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여 FDM 22회선, SCPC 10회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1986년 프랑스와 기술 제휴로 인도양상의 INTELSAT의 위성지구국을 평양에 설치하여 FDM 36회선과 SCPC 18회선을 연결·운용하여 서방 여러나라와의 위성통신 및 위성TV 중계가 가능해졌다.

그후 1990년 11월 북한·일본간 직통 위성통신 회선 및 국제전화회선 상호제공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을 개통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마이크로파 회선능력 24회선, 테이블네트웍 15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 중국의 훈춘지역, 러시아의 포시에트 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통신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전화회선은 나진·청진에 각각 2,000회선, 선봉에 1,000회선이 있으며, 국제전화는 평양에 있는 위성통신 지구국을 통해 가능하다. 북한은 또한 1998년 10월에 35개의 주요 시·군을 연결하는 광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이 통신망에 15개의 시·군이 연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통신시설 현황을 1999년에 북한이 국제통신연합(ITU)에 보고한 통신시설 자료를 통하여 남한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첫째, 전화시설수에서 북한은 약 110만, 남한은 약 2천만 가입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남한이 북한의 18.6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를 남북한의 총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 100인당 회선수로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우 4.82, 남한의 경우 44.40를 기록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9.2배

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북한은 2.7대, 남한은 339.2대로 남한이 북한의 126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국제전화 트래픽은 남한이 북한의 224배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남북한 통신시설 현황 비교

구 분	한국(A)	북한(B)	비고(A/B)
총인구(천명)	48,884	21,388	2.2배
가입회선수(천회선)	20,421	1,100	18.6배
100인당회선수	44.40	4.82	9.2배
100인당회선수 성장률('90~'97)	5.3%	3.9%	-
디지털화(%)	65.1	4.6	14.2배
공중전화(천회선)	339.2	2.7	125.6배
FAX대수(천회선)	400.0	3.0	133.3배
국제트래픽(백만분)	694.8	3.1	224.1배
종사자수(명)	66,600	15,000	4.4배

이와 같은 북한 통신의 낙후성은 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통신을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불가결한 국제화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경제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전화의 보급상황을 주요 도시별로 살펴보면 100,000회선 이상이 설치된 도시는 평양, 함흥, 청진,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원산 등의 대도시에 불과하며, 장거리 전화 및 텔렉스도 이상의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화 설치 상위 6개 도시인 평양, 청진, 강계, 함흥, 혜산, 신의주의 회선 수 총계가 849,700 회선으로 전체의 65% 이상이며, 평양의 전화 시설수가 전체의 17%를 넘고 있다. 이는 주요 통신의 도시 집중 특히 평양에 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시·군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통신 수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의 통신망은 현재까지는 주로 유선전화망을 구축하고 그 일부를 광통신망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선전화망 조차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들간의 사적인 통신을 위한 기반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망의 상황은 양적인 점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III. 통일전 동·서독간 통신교류 실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양독간 접근단계를 대별하여 보면 1950년~1970년까지의 무역거래단계, 1970년~1987년 사이의 교통, 통신 및 문화교류단계, 1987년~1989년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단계 그리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한 국가 통합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통신분야의 교류·협력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5월 독일의 패전으로 동·서독으로 분담됨과 동시에 통신분야도 독일연방채신부(DBP, 서독), 독일채신부(DP, 동독)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양독간 통신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1952년 5월 동독측에서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통신회선을 절단하였으나 서독과 동독지역간의 30여 수동교환회선이 1970년초만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양국간에는 1966년 12월부터 채신분야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어 꾸준한 협의가 지속되다가 1970년 3월 서독 브란트 내각의 동방정책 추진결과 동·서독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어 동년 4월에 양국 채신부 대표회담이 개최되어 "우편·통신교류의 동독측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하였다.

본 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서독은 통신분야 초과 업무 대가로 매년 (1970년~1976년) 3,000만 DM을 동독에 지불하고 1952년 이래 단절된 동·서베를린간 전화회선을 재 연결하며 전화 및 텔렉스회선의 증설과 전화 교환방식을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였다. 1970년 4월 제2차 양독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971년 12월에는 동·서독간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화연합의 정관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 3년동안 채신부 당국은 25차례의 회합을 갖고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1976년 3월 우편 및 통신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서독이 동독에 초과 업무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재조정하는 채신업무 개선합의를 1977년과 1983년에 2회에 걸쳐 체결하였으며 1985년 3월에는 서독에서 동독의 영토를 지나서 베를린까지 광케이블을 건설하되 설치비용으로 서독이 동독에 3,500만 DM을 지불하는 사업추진의 합의를 보게되었다.

각 단계별 동·서독간 통신회선의 접속규모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신회선 접속규모의 발전에 힘입어 서독에서 동독으로 걸려간 전화건수는 1969년에 50만건에서 1987년에 3,600만건으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는 1천만건으로 늘어 나게되었다.

이와같이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통일전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모델로 남북한간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동서독간 통신회선 접속규모(단위:회선)

연도 별	전 화			전 보	텔 렉 스
	서독→동독	서베를린 → 동독	계		
1969년	34 (수 동)	0	34	28	46
1970년	74 (수 동)	150	74	31	90
1971년	134 (반자동)	(반자동)	284	86	102
1972년	182 (반자동)	201(자 동)	383	88	126
1974년	278 (반자동)	201(자 동)	479	88	126
1975년	278 (반자동)	441(자 동)	719	88	126
1978년	440 (자 동)	501(자 동)	941	88	126
1988년	860 (자 동)	669(자 동)	1,529	88	130

하지만, 통일이전에도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즉, 남한의 대북한 통신협력은 통일이후 남북한간 통신통합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통신이 남측 통신기술과 연동가능한 통신망으로 구축되고 또 이에 따르는 필요한 기술 전파를 위하여 통일이전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이전 남한의 대북한 통신협력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신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남한기업의 참여기회가 부여되었을 시,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지역에 진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통신장비의 공여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자유화되되, 특정지역의 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는 국가나 공기업이 추진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

1. 기본방향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는 이질화된 남한과 북한을 통신교류를 통해 관계성을 형성시켜 그림 2와 같이 동질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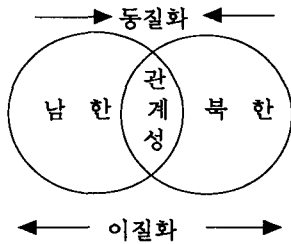


그림 2. 남북한 교류 모델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은 통신소통 루트의 재개 및 확산이라는 통신교류와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에 참여하는 통신협력에 대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통신교류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통신루트를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판문점을 경유한 기존 통신루트를 활용하여 통신소통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경우와 같이 북한내 특정지역과의 통신소통 루트는 다변적으로 개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점진적으로 통신교류의 범위 및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남북한간 통신연결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남북 통신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남북한간 통신교류를 안정화시킨다.

둘째, 남북한 통신협력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추진하여야

2.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북한의 통신은 극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편으로 기회의 땅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북한내 통신 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반대로 급격한 통신 수요를 창출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도 최근 통신산업에서 커다란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로 미루어 북한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최근 급속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통신 산업의 특성상 북한 통신의 낙후성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초기부터 진보된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첨단인 통신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통신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진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투자 지역을 살펴보면, 나진·선봉지대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통신 부문의 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의 통신시설의 구축이다. 나진·선봉지대를 공업기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북한 정부의 재원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 내부자금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힘들므로 외자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둘째, 남북한 내수용 및 해외 수출용 통신 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기지의 구축이다. 남한의 경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재배치가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통신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내에 각 산업의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업단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지역 가운데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나진의 후창 지역과 선봉의 백학 지역에서 중점 개발할 전망이다. 북한은 선봉 백학지구에 전자식 자동교환기 10만 회선의 생산 규모를 가진 통신기계공장 건립사업을 투자 유치중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지역 가운데서는 남포·해주지역이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통신부문 투자 지역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남포·해주 지역은 남한과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도 인접해 있어 북한내 통신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 통신통합에 대비하여 북한내 새로운 통신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양이 중심이 될 것인데, 평양 주위 지역에서의 통신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기존 통신 산업의 대부분이 평양·남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투자 방식으로는 통신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신통합을 고려하여 북한내 인력양성 및 공동 운영을 통한 북한 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영 투자 방식이 유리하다. 한편,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외자 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의 합영·합작 방식외에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BOT 방식이란 민자 유치 인프라 건설 사업의 하나로써, 보통 여러 민간기업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 형식의 프로젝트 전담회사가 인프라시설을 약정기간 동안 건설·운영한 후 인프라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인프라 개발기법이다. 이에 따라 통신부문 역시 BOT 방식의 활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신 기업들의 경쟁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 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북한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으로는 북한 통신산업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당장 범용 전화기, 시설 교환기 등을 비롯해 통신기기 전반에 걸쳐 있다. 또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경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한의 통신분야 전반에 걸쳐 합작 공장 등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통신 설비가 매우 낙후된 상태이므로 남북한간의 통신 기술 협의를 통한 인력 공동 활용 및 육상·해저 전송로 구성 등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투자단계는 단순 조립 위주의 제품을 중심으로 'SKD→CKD→완전생산'의 단계를 밟는 단계적인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신기술협정 등의 체결을 통한 방식 및 규격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V. 결 론

북한은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산주의체제의 속성상 주민들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신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인 통신분야에서의 발

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하여서는 남북한간에 통신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통신을 외부세계와 연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의 확대에 인하여 북한의 통신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남한은 북한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신분야의 대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을 통신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을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동독과 서독간 통일이전 통신교류·협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의 통신시설의 구축 방안과 둘째, 남북한 내수용 및 해외 수출용 통신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가능한 생산기지 지역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투자 방식으로는 합영 투자방식과 BOT 방식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넷째, 남북한간의 정보통신기술 협의를 통한 인력 공동 활용 및 육상·해저 전송로 구성 등의 추진을 모색하였다

향후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국제기구로부터의 협조를 받는 방법에서부터 민간기업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하는 방법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1996. 6.
- [2] 통일원,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pp.131-132, 1993.
- [3]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p.499-511, 1993.
- [4] 세종연구소편, 남북한 통합의 모색, pp.143, 1995.
- [5] 통일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III) - '통신', 「통일경제」, 1997. 8.
- [6] 전민주, 남북 통신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 「한국통신 경영과기술」, pp.44-52, 1993. 8.
- [7] Chang-Ho Yoon and Young-Soo Lee, Trans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North Korea, pp.130. 1998.